

“총파업, 조직하는 자가 승리한다”

노조, 2019년 투쟁 선포식 열어 ... 광주형 일자리·대우조선 매각·노동계약 저지 등 결의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 현충 매각 등 재벌 편향 정책이 일방 추진하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2019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강력한 대정부·대자본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에서 모인 노조 확대 간부 2,000여 명은 오는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을 결의했다.



“포스코 사측은 2월 2일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파열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인을 지병에 의한 심장마비라며 은폐 조작했다”라고 규탄했다. 박종복 조직부장은 “50년 무노조 경영이 모자라 이제 ‘with 포스코’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50년 동안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2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규탄, 광주형 일자리 철회, 대우조선 일방 매각 중단,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 개정 금속노조 2019년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노조는 투쟁 선포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재벌 특혜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대우조선 일방 매각에 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각 과정에서 우수한 LNG 선박과 잠수함 건조 기술을 다 빼앗길 것이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경남과 거제 지역 경제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허순규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이용해 노조를 파괴하고 목숨과 이윤을 맞바꾸고 있다고 분노했다. 허순규 수석은 “교섭 창구 강제 단일화와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로 삼성테크윈 노동자의 노동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재벌, 한국노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과 노동법 개악 시도에 항의 식발하며 결연한 투쟁을 결의했다.

강상호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과 백운호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강하게 규탄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강지부장은 “이미 자동차 조립 70만대 유희시설이 있고 수요층이 줄고 있다. 광주에서 차를 만들어도 더 팔 곳이 없다. 설사 팔린다 해도 지엠이나 기아의 경 소형 차가 대신 희생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투쟁선포식 연단에 올랐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자”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재벌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이어 주휴수당마저 없애려고 한다. 개별 사업장 문제를 넘어 하나의 투쟁 전선으로 총파업을 선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투쟁선포식에서 조재영 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대우조선 매각으로 탄생하는 매머드급 조선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선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지회장은 “대우조선은 매

백운호 현대차 수석부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모리배들이 저지른 사고다”라고 비판했다.

투쟁선포식을 마친 노조 확대 간부들은 이어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서 비정규직 테러”

박한우 사장과 폭행 당사자 검찰 고발 ... 현대차, 정부 중재 비정규직 직접교섭 약속 철저 외면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여섯 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순회를 벌이던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한 기아자동차 관리자들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서울중앙지점에 고발했다.



쟁취했지만 다섯 달이 넘도록 아무 진전이 없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병훈 지회장은 “현대차가 저렇게 버티는 배경은 불법과전 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에 나서지 않는 검찰 때문이다”라며 “노동부와 검찰이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관철할 의사가 없다면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월 1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아자동차 원청의 비정규직 집단 테러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익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과 지회 간부들은 2월 18일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화성공장 PDI 공장을 찾았다. 회사는 관리자 300명을 동원해 지회 간부들의 현장순회를 가로막았다. 지회 간부들이 항의하고 공장에 들어가려 하자 관리자들과 김수익 지회장의 허리를 낚아채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저질렀다. 김수익 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한 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회 간부들을 폭행한 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라며 “정몽구와 정의선의 범죄행위에 검찰과 법원이 눈 감고 있는 와중에 불법과

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순회를 하던 간부를 폭행했다. 누구라도 분노할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노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회 간부와 조합원 열다섯 명을 300여 회사 관리자들이 집단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지회는 오늘 중식집회를 열고 현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과전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과 불법과전 범죄 고소·고발에도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가 15년 동안 불법과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있다.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에 노동자만 죽어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병훈 지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 단식투쟁으로 불법과전 문제에 대한 직접교섭 협의를

노동자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불법과전 사건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년째 대법원에 묶여 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가 과전법에 정한 ‘과전노동자’, 현대·기아차가 ‘사용사업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차액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공문을 받고 기아차처럼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원청인 현대·기아차 압박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